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초판한하호텔 PSPD, 나우누리유: 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김민영 : 723-5052)
제 목 '긴급점검-정권인수과정을 진단한다'
날 짜 1998. 1. 14. (총 9 쪽)

보 도 자 료

긴급토론회-정권인수과정을 진단한다

일시 및 장소 : 1998. 1. 14 오전 11시 / 종로성당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인수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4일 '긴급점검-정권인수과정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각종 공문서의 파기, 인수위에 대한 안기부의 보고거부 파동과 같이 정권인수과정이 여러모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권인수와 신정부의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규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정권인수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본 토론회에서 고려대 행정학과 함성득(咸成得)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인수위 활동이 법률적 근거나 관행, 선례 등이 미비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정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권인수'와 '치밀한 정부구성'이라는 정권이양기의 두가지 과제를 빈틈없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은 정부정책과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과 인수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향후 국정의 방향과 정책개발, 인적구성 등은 '정부구성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4. 한편,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정부의 핵심부처들이 인수과정에 비협조적이며 문서파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권이양에 있어 절차와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대통령 인수인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대통령기록, 안기부기록 등 정부기록이 대규모로 파기 또는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기록보존법, 안기부기록보존법과 공문서파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 이날 토론회에는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희연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 한나라당 최병렬의원, 건국대 법학과 정종섭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별첨자료■

- 주제발표문 요약 1.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위기와 기회
2. 권력이양기와 공문서 파기문제